

# 전남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도'

## 기후부와 지자체 '첫 협약'

##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

## 한전·에너지공단 협력 강화

전남도는 11일 해남 솔라시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첫 지자체-기후부 협약이다. 전남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강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 상생 기반 마련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전성 강화 △유산 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기술 개발 등이다.

전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기업 유치,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한층 단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첨단전략 산업 클러스터 조성, RE100 산업단지 지

공동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이 공식 출범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상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현장대응단은 권역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한전·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헛빛·비 lawmaker 등을 영농형 태양광, 전력망 구축 등 현안의 임지 발굴과 적합성 컨설팅, 금융지원 연계를 통해 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

산업국장은 '전남 재생에너지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 HVDC 조기 구축 △지역 전력망 확충 △ ESS 등 계통 효율화 설비 대규모 투입 △ 해상풍력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진도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등 전남 재생에너지 핵심 현안을 정부에 집중 건의했다.

강원도부지사는 축사에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은 중앙정부, 지방·유역환경청, 한전·에너지공단, 지자체가 함께하는 최초의 상시 협력체계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전남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발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AI 산업 발전과 국가균형 성장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서구, 디지털 저장매체 무료 파기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경)는 11일 서구청 물품보관장소에 마련된 하드디스크 파기장치를 이용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하드디스크(HDD), CD/DVD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 신정훈,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발의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매각으로 투기·이해충돌 차단  
전남지사 후보로 공직사회 부동산 윤리 기준 강화 앞장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겸성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했던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단순 일괄 백지신탁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도입해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다른 법안들이 주로 고위 공무원이나 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기재부·행안부·국토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직원 등으로 백지신탁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 주거와 생활의 필수 재료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런 인식 변화가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벼 경영안정대책비 285억 지급  
도, 11만7000농가 '전국 최대'

## 광주시의회, 시내버스 '상생 성과공유제' 제안

### 목표원가 달성 시 절감 예산, 시·버스업체·시민 공유

광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상생 성과공유제'를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제시한 '성과공유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혜택을 시민과 버스업체, 운수종사자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11일 박필순·김용임·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진행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약 145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사후정산제' 방식은 원가 절감 시자(성과급)가 나누는 구조다.

이현규 기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과이운' 제도는 실제 원가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점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원가 관리제'와 '성과공유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핵심은 시와 버스업체가 합의해 '목표 운송원가(상한선)'를 정하고 업체의 경영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을

제도 도입 시, 버스업체는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과 경영 혁신에 나서게 되고, 이는 곧 시 재정 부담 완화와 시민 편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도시철도-시내버스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도시철도 개통 후 적정 버스 대수 설정, 마을버스·광역버스 등 기능체계 재정립, 광주형 요금 조정 정례제 도입, 버스 전용차선 운영 개선 등 발전 방안도 제시됐다.

박필순 시의원은 "갈수록 커지는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전국적으로 사후관리제·목표원가제 등 준공영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가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는 깨씨무늬병 등 젖은 재해와 생생비 상승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기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285억 원(도비 114·시비 171)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전남의 지원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자연재해와 생생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기가 안정적으로 쌀 산업을 이어가도록 소득을 보완하는 농업 지원 정책이다.

지금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1000㎡(0.1㏊)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11만7000농가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2㏊이며, ha당 32만5000원을 주기 때문에 2㏊까지 재배하면 최대 6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현규 기자

## 옛 상무소각장 활용 '광주 대표도서관'

### 시공사 부도·붕괴 등 '악재 겹쳤다'

2022년 9월 착공 후 중단·재개 반복

현장 붕괴로 내년 하반기 개관 불투명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을 활용한 광주대표도서관 조성 사업이 시공사 부도에 이어 11일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사업이다.

서고, 유아·어린이·일반·멀티미디어 자료 이용실·문화·교육시설·체력단련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2019년 11월 국제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브라니슬라프 레닉의 작품이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건설 사업 발주처는 광주시, 건설 관리는 동일건축·미드엔지니어링이 맡고 있다. 2022년 9월 착공에 들어간 광주대표도서관은 당초 올해 말 개관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어왔다.

광주대표도서관은 흥진건설과 구일종합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았다.

지난 6월 시공사 중 하나인 흥진건설의 모기업(영토부)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

어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 자재가 압류되는 일도 빚어졌다.

이후 구일종합건설이 흥진건설의 지분을 인수 받아 9월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 완공,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붕괴 사고로 또 다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사망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李 대통령 "자원 총동원해 구조에 총력"

노동장관, 현장 방문 위해 순서 바꿔 먼저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대상 업무보고가 시작된 직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등 관련 부

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일단 구조에 총력 다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이 보고가 끝나고 (광주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묻고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농식품부, 노동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야 해 노동부 보고가 먼저 이뤄졌다.

업무보고에 배석할 예정이었던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부장관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시, 지역재난대책본부 가동…현장회의 열어

### 추가장비 투입 등 신속한 협력 방안 논의

광주시가 서구 치평동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를 즉시 가동했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공사 현장에서 첫 현장회의를 열고 지대본을 즉시 가동했다.

첫 현장회의는 강기정 시장과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DJ센터에서 인공지능 시관학교 6기 수료식을 겸한 성과 발표회를 갖던 중 사고 소식을 듣고는 잔여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고

다. 강 시장은 또 "매몰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구조를 위한 크레인 등 추가장비 투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붕괴사고 수습' 강기정 시장 출판기념회 연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내부 조직을 재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기했다.

강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내부 조직을 재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전념하기로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